

일반 논문

사회극의 시각에서 본 광주항쟁¹⁾

강인철 _한신대학교 교수

논문요약

이 글은 빅터 터너가 발전시킨 사회극 개념을 활용하여 광주항쟁을 새로운 각도에서 분석해보려는 최초의 시도다. 사회극의 시각으로 접근할 경우 광주항쟁은 네 가지 점에서 매우 특이한 사례였다. 첫째, 최초의 '위반'이 아래로부터가 아니라 위로부터, 즉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에 반하는 신군부 세력의 계엄 전국 확대 조치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교정 조치가 위(신군부)와 아래(광주 시민)로부터 모두 나왔다는 점, 다시 말해 대립하는 양측 모두가 항쟁의 특정 시점들에서 번갈아가며 '교정의 주체'로 등장했다는 점도 특이했다. 셋째, 신군부 측과 저항세력 측에서 시도한 교정 조치들은 실패를 거듭했고, 그런 와중에 '교정에서 위기로의 회귀' 양상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 넷째, 1980년 당시 광주 사회극은 네 번째 단계에서 기존 질서로의 '재통합'에 실패하여 기존 체제의 '분열'로 귀착된 상황에 더욱 가까웠다. 특히 광주 사회극의 마지막 단계는 항쟁이 진압된 후에도 무려 20년 이상 분열 상황이 계속되고서야 비로소 재통합의 방향으로 종결될 수 있었다.

■ 주요어: 사회극, 빅터 터너, 5·18, 광주항쟁(광주민주화운동), 리미널리티, 커뮤니티스

1) 이 글은 2018년 9월 28일 개최된 광주인권평화재단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논문 중 일부 내용을 대폭 수정·보완한 것이다.

1. 사회극

2020년이면 5·18 광주항쟁도 40주년을 맞는다. 이에 따라 광주항쟁에 대한 학계 안팎의 관심도 더욱 커질 것이다. 광주항쟁 연구에서도 의미 있는 전환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뜻 깊은 시기에, 필자는 영국의 문화인류학자인 빅터 터너가 발전시킨 사회극(social drama) 개념을 활용하여 광주항쟁을 새로운 시각에서 분석해보려 한다(V. Turner 1969; 1974; 1982; 1987).

지금까지 사회극 개념을 5·18 광주항쟁 연구에 적용해보려는 시도는 없었다. 그러나 이 개념을 이용하여 한국사회의 다른 현상들을 연구한 사례는 일부 존재한다. 1999년에 개봉된 영화 <쉬리>나 2011년 개봉된 애니메이션 <돼지의 왕>, 2007년에 발생한 '신정아-변양균 사건' 등을 사회극의 관점에서 연구한 결과들이 발표된 바 있다(김대현 1999; 류유희·이승진 2014; 이기중·김명준 2008). 그렇지만 사회극 개념을 사회운동이나 정치적 갈등, 혁명적 사태 등에 적용해보려는 시도는 아직 없었다. 그러나 4·19혁명이나 해방정국, 1979년의 부마항쟁, 1980년의 서울의 봄과 사북항쟁, 광주항쟁, 직선제 개헌을 쟁취해낸 1987년 6월항쟁, 2002년과 2008년의 촛불시위,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과 장례, 4·19에 이어 민중의 힘으로 다시금 정권을 전복시킨 2016~2017년의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한국 현대사의 다양한 국면들에 사회극의 분석틀을 적용하여 풍부한 학문적 성과들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사회극 개념은 사회집단들 혹은 정치세력들 간의 역동적이고 갈등적

이고 전략적인 상호작용을 상세히 관찰할 수 있다는 이점을 제공한다. 아울러 사회극 개념은 단기간의 정치·사회적 격변 사태만이 아니라, 그 전후까지, 특히 ‘격변 이후’까지 긴 호흡으로 살피는 넓은 시야를 제공해주는 장점도 있다. 사회극 개념은 누군가에 의해 미리 짜인 각본에 따라 정치·사회 과정이 정해진 경로에 따라 진행된다는 식의 음모론이나, 우리가 알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거대한 힘들이 사람들을 무대 위의 꼭두각시처럼 조종하여 사회를 움직여간다는 식의 구조결정론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사회극은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다. 사회극은 예측하기 어려운 극적인 사건 전개를 동반하면서 사회를 깊은 혼란에 빠뜨리기도 하고, 집단 간 상호작용의 흐름을 기대와 다른 엉뚱한 방향으로 바꾸기도 하고, 사회를 급격한 개혁과 재구조화 쪽으로 몰고 가기도 한다. 무엇보다 사회극 개념에서는 ‘일상의 초월’ 혹은 ‘일상으로부터의 탈주(脫走)’ 측면이 특별히 강조된다. 따라서 사회극 이론에서는 기존 지배 규범의 이완 내지 작동 중지, 탈(脫)일상과 탈(脫)구조, 일상생활과는 매우 다른 의식 및 감정의 흐름, 일상적 인간관계와는 전혀 다른 이타적이고 결속적인 인간관계의 형성, 기존 사회질서에 대한 비판적 성찰성과 새로운 사회질서를 상상하기 등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진다. 빅터 터너가 사회극 개념을 자주 리미널리티(liminality) 및 커뮤니티스(communitas) 개념과 연결시키는 이유도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다.

필자는 이 글에서 광주항쟁의 ‘과정’뿐 아니라 ‘항쟁 종결·진압 이후’ 시기에도 중점을 두고 ‘광주 사회극’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려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터너가 제시한 사회극의 ‘4단계론’을 따르되, 이 개념

을 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일정한 이론적-방법론적 혁신을 도모할 것이다(1절). 이어 사회극의 틀을 광주항쟁에 직접 적용하면서 광주 사회극이 드러내는 독특한 성격들을 제시할 것이다(2절). 그리고 1980년 5월 27일 새벽 계엄군에 의해 항쟁이 군사적으로 진압된 ‘이후’에 광주 사회극이 기존 질서로의 ‘재통합’으로 종결되었는지, 아니면 사회적 해체 혹은 새로운 정치사회 질서의 수립으로 이어질 ‘균열’로 종결되었는지를 추적해볼 것이다(3절).

터너의 사회극 개념 저변에는 “사회생활의 연극적 잠재력”(V. Turner 1982, 9)에 주목하는 것, 다시 말해 사회적-정치적 과정이 연극과 여러모로 유사하다는 발상이 깔려 있다. 터너는 사회극을 “객관적으로 따로 구분해낼 수 있는, 갈등적이고 경쟁적인 혹은 호전적인(agonistic) 유형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연속(sequence)”(V. Turner 1987, 33)으로 정의했다. 그는 다른 곳에서 사회극을 “갈등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무조화적이거나(aharmonic) 부조화적인(disharmonic) 과정의 단위들”(V. Turner 1974, 37)로 정의하기도 했다. 터너는 가족에서 국가에 이르기까지 사회생활의 거의 모든 수준에 사회극 개념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으며, 전통사회와 현대사회를 포함하여 사실상 모든 사회에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아울러 터너는 사회극 개념이 정치 과정이나 정치 상황의 분석에 특히 유용하다고 주장하면서, 몸소 이 개념을 ‘혁명적 상황’(1810년의 멕시코독립혁명)에 적용해보기도 했다(V. Turner 1974, 33, 98-155; 1982, 10-11, 71).

보다 구체적으로, 터너는 사회극이 네 단계, 즉 ① 위반(breach), ②

위기(crisis), ③ 교정(redress) 혹은 치유(remedy), ④ 재통합(reintegration) 혹은 분열의 인정(recognition of schism) 단계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기존 구조, 규범, 규칙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나 사건이 ‘위반’이라면, 위반 행위가 확산되는 가운데 다양한 세력들 사이의 갈등이 공공연하게 벌어지면 ‘위기’ 단계가 시작된다. 얼마 후 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한 ‘교정’ 시도가 등장한다. 위기 극복을 위해 동원되는 교정 기구·기제나 구체적인 교정 조치·수단은 다양할 수 있다. 그것은 전쟁이나 혁명까지 포함하는 ‘정치적-군사적’ 과정, 중재나 조정·재판 등의 ‘사법적’ 과정, 그리고 여러 형태의 ‘의례적’ 과정을 포함한다. 교정이 성공적일 경우 갈등하는 양측 사이에 ‘화해’나 ‘합의’가 이루어져 혼란에 빠진 사회집단들의 ‘재통합’이 이루어진다. 반면에 경쟁하는 세력들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분열’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 경우 대립하는 세력 간에 (때로는 공간적 분리까지 포함하는) 영구적인 균열이 생겨날 수 있다. 터너에 의하면 2단계(위기)와 3단계(교정)에서 리미널리티와 커뮤니타스 현상이 자주 발생하며, 3단계와 4단계(재통합 혹은 분열)에서 성장성 및 그에 기초한 사회개혁과 같은 사회-정치적 기능이 주로 나타난다(V. Turner 1974, 38-42; 1982, 9-10, 68-71, 92). 약간 부연하자면, 리미널리티는 아놀드 방주네프가 통과 의례의 중간 단계로서 처음 제시하고 빅터 터너가 더욱 확대하고 발전시킨 개념이다. 커뮤니타스 개념은 빅터 터너가 처음 제안했고, 그가 죽은 후 부인인 에디스 터너에 의해 더욱 풍요롭게 재탄생했다(Van Gennep 1960; V. Turner 1969, 1974, 1982; E. Turner 2012; 반 젠넵 1985; 터너 2005, 2014, 2018). 방주네프와 터너의 논의를 종합할 때, 필자는 리미널리티의

특징을 ① 반구조와 초월성(일상성의 초월), ② 모호성과 애매함, ③ 집합적이고 공적인 성격, ④ 평등성과 연대성, ⑤ 사회의 일시적 투명화와 그에 대한 성찰성, ⑥ 비판과 대안적-유토피아적 질서의 제시(창조성·전복성), ⑦ 기성질서 대표자들에 의한 위협시, ⑧ 일시성 혹은 단기 지속 등 여덟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본다. 커뮤니타스는 반구조, 공적 성격, 일시성, 대안적 질서의 제시, 기성질서 측의 위협시 같은 특징들을 리미널리티와 공유한다. 그런 면에서 커뮤니타스와 리미널리티는 상당히 유사한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양자는 서로 구분되어야 할 개념들이기도 하다. 요약하자면, 리미널리티의 전복성에 의해 발생하고, 리미널한 전이 상태(liminal transition)에 놓인 사람들 사이의 '사회관계'를 특징짓는 양식이 바로 커뮤니타스 개념의 정수라고 말할 수 있다. 이 경우 리미널리티와 커뮤니타스 간의 시간적 선후 관계가 비교적 분명해진다. 이때 '커뮤니타스적 사회관계'는 ① 평등성과 겸손함, ② 우애, 연대성, 인류애, ③ 인격적, 직접적, 전인적 만남, ④ 예고의 상실과 이타성, ⑤ 집단적 기쁨, 그리고 자유·해방·성스러움·신비체험을 포함하는 고양된 감정들, ⑥ 행위와 인식의 융합 등의 특징들을 보여준다.

필자는 기존의 사회극 개념에서 몇 가지 '이론적-방법론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견지에서 우리가 사회극 개념을 활용할 때 다음 세 가지를 특별히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사회극의 2~3단계는 왕복과 순환, 역진·후진이 모두 가능한 지극히 '유동적인' 과정임에 유의해야 한다. 무엇보다, 3단계 교정에서 2단계인 위기 단계로 퇴보할 가능성을 들 수 있다. 터너도 말한 바 있듯이,

“교정이 실패하면 통상 위기로의 회귀(regression to crisis) 현상이 나타난다. 이때는 전쟁, 혁명, 간헐적 폭력, 억압, 반란 등 다양한 형태로 직접적인 힘이 행사된다”(V. Turner 1974, 41; 1982, 71, 92). 교정의 실패로 위기가 재발하거나 고착되는 ‘교정-위기의 반복’ 사태는 위기의 장기화, 나아가 재통합이 아닌 분열 가능성의 증대로 귀착된다.

둘째, 사회극의 결말은 항시 ‘열린’ 상태임에 유념해야 한다. 사회극은 통과의례처럼 예외 없이 통합으로 끝나도록 예정돼 있는 ‘닫힌 구조’가 아니다. 사회극은 어떤 시나리오도 가능하고 허용되는 ‘열린 구조’이다. 터너가 사회극의 마지막 단계에서의 ‘분열’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회극이 (통합이 아닌) ‘분열’로 종결되는 상황은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 사회극은 장기 지속하는 심각한 사회적 적대, 혹은 혁명적 사태를 매개로 한 전혀 새로운 사회질서의 수립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셋째, 1단계의 ‘위반’은 항상 아래(불만에 찬 대중)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는 점, 그리고 3단계 ‘교정’은 항상 위(지배세력)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는 점 또한 강조해야 한다. 혁명을 정치적 교정 조치의 하나로 인정하는 데서도 보듯이, 터너가 이런 가능성들을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²⁾ 그러나 필자는 전체적으로 터너가 이 측면을 소홀히 취급했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터너는 위반을 아래로부터의 현상처럼, 교정을 위로부터의 현상처럼 다루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필자는 지배층의 일부에 의한

2) 터너는 한곳에서 “대규모 복합사회의 어떤 역사적 국면에서는, 만약 사회적인 가치 합의가 붕괴하고 전례 없는 새로운 역할·관계·계급이 출현할 경우, 봉기(rebellion) 혹은 심지어 혁명(revolution)을 통해 교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적었다(V. Turner 1974, 71).

쿠데타나, 국제적 법질서에 반하는 국가폭력이나, 중대한 국가범죄도 얼마든지 사회극을 촉발하는 ‘위반’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처럼 ‘위반과 교정의 주체’ 자체가 논쟁거리이며, 사회극에서 ‘최초의 위반’이 위에서 오는가 아니면 아래에서 오는가 하는 것 자체가 흥미로운 질문이 아닐 수 없다. 이 모두가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과 사례들에 따라 경험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쟁점들이다.

2. 광주 사회극

이제 광주항쟁에 사회극의 틀을 적용해보자. ‘광주항쟁의 사회극’에 접근할 경우, 시기와 단계의 구분, 즉 위반—위기—교정/치유—재통합/분열의 단계들을 어떻게 시기별로 구분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앞으로도 여러 방법과 주장이 가능할 것이다. 일단의 필자의 잠정적인 입장을 제시해보려 한다.

우선, 사회극의 첫 단계인 ‘위반’을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까? 필자가 보기에, 광주항쟁의 사회극이 시작되도록 만든 최초의 ‘위반’은 신군부의 권력 공고화를 위한 시도로서 광주 시민들의 격렬한 저항을 촉발했던 5·17 계엄 확대 조치였다. 이는 조정환(2009, 176-177)이 1979년 12·12부터 1980년 9월 1일 전두환의 대통령 등극에 이르는 신군부의 ‘다단계 쿠데타’에서 제3차 쿠데타로 지목했던 사건이었다.

부마항쟁에 이은 박정희 대통령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유신체제는 격

심하게 동요했다. 박정희 사망 직후 구 지배세력은 최규하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를 출범시키면서 비상계엄을 발령했다. 당시 군부와 야당의 지도자들은 ‘유신헌법 폐지와 개헌을 통한 민간정부 수립’의 경로에 공감했다. 12·12쿠데타 이후 신군부 중심의 기득권 세력에 맞서 재야·학생운동과 야당은 민주주의 회복, 계엄 해제, 유신세력 퇴진, 대통령직선제 재도입을 포함한 개헌과 민주정부 수립을 추구했다(조정환 2009, 176-180). 극소수 정치군인들에 의한 전격적이고 일방적인 군사쿠데타는 유신체제 해체, 군사독재체제 종식과 민주화 이행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합의와 충돌하는 명백한 위반 행위였다. 이처럼 위반이 ‘아래’(저항하는 대중이나 정치세력)가 아니라 ‘위’(신군부)로부터 발생했다는 점에서, 사회극 초기 단계에서부터 광주 사회극의 독특한 면모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광주 사회극의 두 번째 단계인 ‘위기’ 단계는 계엄령의 전국 확대에 대한 광주 지역 학생과 시민들의 저항에 의해 성립되었다. 다시 말해 신군부의 ‘위반’ 행위에 대해 광주 사람들이 강하게 저항했고, 신군부가 이런 정당한 시민적 불복종 행동에 가공할 폭력으로 대응함으로써 광주 사회극은 공공연한 ‘위기’ 단계로 돌입했다. 신군부의 계엄 전국 확대에 대해 서울을 포함한 한국의 다른 지역들에서는 저항이 거의 없었거나 약했던 데 비해, 광주의 학생·시민들은 강력하고도 끈질긴, 그리고 영웅적인 저항으로 대응했다. 이런 거센 저항이 없었더라면, 사태는 이 시점에서 중단되고 말았을 것이고, 따라서 광주 사회극 자체가 아예 존재할 수조차 없었을 것이다. 지배층 일각의 일탈적 행위에 의해 ‘위반’이 발생하고, 평범한 시민들이 이를 저지하고 나섬으로써 사회극의 ‘위기’ 단계로 진입한다는 이런 독

〈표 1〉 신군부와 시민 측의 교정 조치들

	신군부 측	시민 측
1차 교정 조치	유혈 진압과 광주 고립화	시민 참여와 불복종운동 조직
2차 교정 조치	집단 발포와 정보 왜곡	무장 항쟁
3차 교정 조치	도청 탈환작전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 모색

특한 역사적 경로 역시 광주 사회극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다.

그렇다면 사회극의 세 번째 단계인 ‘교정’ 단계는 어떻게 설정될 수 있을까? 필자가 보기에 광주 사회극의 ‘교정’ 단계를 설정하는 문제는 결코 만만치 않으며, 실제로 상당히 복잡한 양상이 거듭되었다. 신군부 측, 그리고 이에 저항하는 시민 측이 ‘모두’ 일정 시점에서 교정의 주체로 나섰고, 그것도 각각 최소한 세 차례 이상씩 교정 조치들을 동원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를 요약해놓은 것이 〈표 1〉이다. 교정 단계에서 발견되는 이런 역사적 복합성이 광주 사회극의 또 다른 특징이기도 했다.

5·17 계엄 확대 조치가 광주 시민들의 저항에 부딪치자, 신군부 측은 5월 18~19일에 걸친 잔인한 유혈 진압작전과 광주 봉쇄·고립화 공작으로 대응했다. 필자는 이를 신군부 측이 동원한 첫 번째 교정 조치(제1차 신군부 측 교정 조치)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필자는 신군부 측의 유혈 진압작전에 맞선 시민들의 조직화된 저항을 시민들이 발동한 최초의 교정 조치(제1차 시민 측 교정 조치)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5월 19일 오후부터 21일 오전에 걸쳐 대학생 중심이던 항의시위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해 거대한 시민 불복종운동으로 발전했던 일을 시민 측의 제1차 교정 조치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민 측에서 나온 최초 교정 조치는 광주 시내 곳곳에서 ‘작은 해방구들’과 ‘광주 커뮤니티스’를 만들어냄과 동시에, 계엄군의 잔악한 만행을 일시적으로나마 중단시키거나 약화시키는 효과를 발휘했다.

5월 18~19일에 걸친 신군부 측의 무력진압과 검거 작전이 20일에 실패로 판명됨으로써 위기는 심화되었다. 군대가 비무장 시민들에게 제압당하는 비현실적인 사태가 현실화되었다. 이런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신군부 측이 동원한 두 번째 교정 조치(제2차 신군부 측 교정 조치)가 5월 21일 오후의 집단 발표였다. 신군부 측 2차 교정 조치에는 광주항쟁의 실상(實狀)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왜곡과 왜곡 선전도 포함되었다. 신군부 측의 집단 발표에 시민 측은 무장 항쟁으로 맞섰는데, 필자는 이를 시민 측이 발동한 두 번째 교정 조치(제2차 시민 측 교정 조치)로 판단한다. 저항하는 시민들은 무기를 탈취하여 시민군을 조직하면서 계엄군을 광주 바깥으로 몰아냈다. 그 결과 유혈 학살극이 일시적으로 종식되었고, 계엄군 지배와 폭정으로부터 해방된 광주는 평화 상태로 회귀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보면, 집단 발표라는 신군부 측의 극대화된 교정 조치마저 실패로 돌아감으로써 기존 위기가 더욱 고조된 형태로, 즉 ‘신군부의 광주 통치권 상실’이라는 형태로 재발되었다. 광주의 항쟁을 조속히 진압함과 동시에 다른 지역들로 저항이 확산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위기를 교정하고 구체제로의 재통합을 달성하려던 신군부 측 시도가 완전히 빗나가는 가운데 ‘교정에서 위기로 회귀’하는 상황이 나타났던 것이다.

‘해방광주’의 도래와 동시에 ‘제3차 시민 측 교정 조치’가 나타났다. 그것은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이라는 시도였다. 각종 수습위원회가 조직되고, 쉼기대회 형태의 시민 정치교육 및 요구사항 수렴 과정이 이어졌다. 당시 시민 측(항쟁 지도부)이 가진 협상의 지렛대는 작게는 ‘무장해제’, 크게는 ‘도청 이양’으로 상징되는 ‘해방광주 전체’, 즉 ‘광주의 통치권’이 양이었다. 그러나 시민 측 교정 조치는 신군부 측의 완강한 태도에 막혀 실패로 돌아갔고, 이로써 위기는 고착되었다. 이것이 5월 22~26일의 상황이었다. 5월 27일의 광주시 재진입과 전남도청·YWCA 탈환 작전은 ‘제3차 신군부 측 교정 조치’였다. 이 군사작전이 성공함으로써 사태는 신군부 측의 압도적인 우위로 재차 반전되었다.

광주 사회극의 2~3단계 설정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다. 앞에서 터너를 인용하여 말했듯이, 사회극의 2단계(위기)와 3단계(교정)에서 리미널리티 현상과 커뮤니티스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 따라서 광주항쟁의 특정 시점에서 리미널리티와 커뮤니티스 현상의 존재가 확인된다면, 바로 그때가 사회극의 위기 및 교착 단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광주항쟁 당시 리미널리티 현상은 이미 5월 18일부터 나타나고 있었다. 분리—전이(리미널리티)—통합으로 구성되는 통과의례의 3단계 도식에서 ‘분리’ 단계, 즉 구조(구체제)로부터의 분리 및 일상생활의 초월은 리미널리티 단계로 진입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광주에서의 분리는 삼중적이었는데, 광주는 (1) ‘광주 바깥세상’과 분리되었고, (2) 1980년 5월 당시 한국사회를 지배하던 ‘구조’와 분리되었고, (3) 5월 17일까지

광주 사람들에게 친숙했던 ‘일상세계’와도 분리되었다. 광주항쟁에서 분리 과정은 5월 18일부터 21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따라서 광주 리미널리티의 형성 과정은 계엄군의 강제적·무차별적 시위 진압이 시작된 5월 18일에 시작되어 계엄군이 시 외곽으로 퇴각한 21일경에 사실상 완결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기존질서를 뒤흔드는 ‘변혁의 리미널리티’와 기존질서를 강화하는 ‘질서의 리미널리티’라는 두 리미널리티 유형을 구별할 수 있다면,³⁾ 광주항쟁의 과정에서 발생했던 리미널리티는 명백히 ‘변혁의 리미널리티’ 쪽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필자는 항쟁 기간 동안 광주에서 커뮤니티스 현상 또한 강렬하고도 빈번하게 나타났다고 생각한다. 이미 5월 19일 오후 무렵부터 시위에 참여한 광주 시민들 사이에 일상적 삶 속에서는 발견되기 어려운, 독특한 공동체적 질서와 연대의식이 뚜렷하게 목격되기 시작했다(최정운 2012, 42-43, 154-155, 160, 162, 165, 169-170, 174; 임철우 1997b, 178). 김성국(2009, 306)이 일별했듯이, 광주항쟁 기간 형성된 이러한 공동체적 질서를 대상

3) 필자는 리미널리티 개념을 ‘지배’와 ‘저항’의 맥락 모두에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변혁·해방의 리미널리티’(liminality of transformation and liberation)와 ‘질서·충성의 리미널리티’(liminality of order and loyalty)라는 두 가지 유형의 리미널리티를 구분하고자 한다. 여기서 ‘변혁·해방의 리미널리티’는 기존 체제에 대한 저항을 촉진하고, 나아가 구체제를 타파할 새로운 유토피아적 비전과 희망을 만들어낸다. 반면에 ‘질서·충성의 리미널리티’는 순응적 주체들을 주조하고, 사람들을 기존 체제의 충성스런 참신자(true believer)로 거듭나도록 하고, 그럼으로써 기존 체제를 보강한다. 통과의례의 맥락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리미널리티, 그리고 1970~1980년대 화랑연수원·충무연수원·사임당교육원·새마을연수원의 합숙 연수·교육 과정에서 종종 발생했던 리미널리티는 (변혁·해방의 리미널리티와는 거리가 먼) ‘질서·충성의 리미널리티’였다. 통과의례의 맥락에서 처음 제안된 리미널리티 자체가 근본적으로 ‘보수적인’ 개념이었다.

으로 절대공동체(최정운), 역사공동체(정근식), 체험-기억공동체(정일준), 시민공동체(김성국)와 같은 다양한 명명(命名)이 시도된 바 있다. 광주항쟁 과정에서 형성된 공동체적 질서를 ‘코뮌’ 혹은 ‘코뮌주의’로 설명하려는 시도도 있었고(카치아파카스 2009; 이진경·조원광 2009), 천유철(2016)은 ‘시민공동체’와 ‘항쟁공동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김인국(2015, 5)은 1980년 5월 광주에서 형성된 ‘절대공동체’를 “가장 온전한 나라이며 가장 완전한 민주주의의 구현인 하느님나라를 계시해준 사건”이라고 평가했고, 김희송(2015)은 항쟁 당시의 ‘광주공동체’를 ‘놀람·분노·연대의 공동체’(저항 시기)와 ‘협력·나눔·살림의 공동체’(해방 시기)로 제시한 바 있다. 광주 커뮤니티스는 ‘해방광주’가 구현된 5월 21일 밤부터 항쟁 진압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가장 순수하고 화려한 형태로 구현되고 지속되었다. 에디스 터너가 발전시킨 커뮤니티스 유형론에 따르자면,⁴⁾ 광주항쟁 과정에서는 ‘혁명·해방의 커뮤니티스’와 ‘재난의 커뮤니티스’가 주로 형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여기에 ‘의례-연극의 커뮤니티스’를 추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유형의 커뮤니티스는 5월 22일부터 26일 오후까지의 희생자 추모 활동과 시민궐기대회에서 가장 명료하게 출현했다. 광주항쟁에서 관찰되는 이런 다양한 커뮤니티스 유형들을 아우를 만한 가장 적

4) 빅터 터너가 커뮤니티스 개념을 의례(특히 통과의례)의 맥락을 넘어 사회·문화·예술·정치 등 매우 다양한 맥락과 상황·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제시했다면, 에디스 터너(E. Turner 2012)는 ‘거의 모든’ 삶의 영역들에 적용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스 개념의 범위를 최대한 확장했다. 그녀는 축제·음악·스포츠·통과의례에서 발견되는 커뮤니티스에 대해 설명할 뿐 아니라, 일(노동)의 커뮤니티스, 재난의 커뮤니티스, 혁명과 해방의 커뮤니티스, 비폭력 저항의 커뮤니티스, 자연의 커뮤니티스 등 새로운 커뮤니티스 유형과 범주들을 제시했다.

절한 표현은 아마도 ‘해방의 커뮤니티스’일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광주 시민들이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고 ‘절대공동체’를 형성하여 나흘간의 투쟁을 통해 공수부대 3개 여단을 물리쳤던 과정을 최정운(2012, 185-186, 199-201)은 ‘해방의 경험’으로 요약한 바 있다. 해방의 커뮤니티스는 광주의 변혁적 리미널리티 속에서 형성된 독특한 사회·인간관계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광주항쟁에서 형성된 ‘변혁의 리미널리티’와 ‘해방의 커뮤니티스’에 대해서는 다른 논문을 통해 더 심도 있게 논의 되어야 할 것이다.⁵⁾ 그러나 어쨌든 광주항쟁 과정에서 ‘변혁의 리미널리티’와 ‘해방의 커뮤니티스’가 형성되었고, 사회극의 2~3단계에서 리미널리티·커뮤니타스가 주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필자는 광주항쟁의 전체 기간(5월 18~27일)이 광주 사회극의 ‘위기’ 단계와 ‘교정’ 단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여기서 앞서의 신군부-시민 측 교정 조치들에 관한 논의로 돌아가 보자. 시민 측의 세 차례 교정 조치는 몇 가지 일시적인 효과들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실패로 돌아갔다. 신군부의 세 가지 교정 조치 중 첫 번째였던 유혈 진압과 두 번째 교정 조치였던 집단 발포는 더 큰 위기를 초래했을 뿐이지만, 세 번째 교정 조치였던 도청·YWCA 탈환작전은 성공했고 시민항쟁을 완전히 잠재웠다. 그렇다면 계엄군이 도청을 재점령한 5월 27일 새벽 이후의 시기를 광주 사회극의 종결로 볼 수 있을까?

5) 필자는 이런 작업을 이번 논문과 거의 동시에 발표되는 다른 학술지 논문(“해방의 커뮤니티스와 변혁의 리미널리티: 광주항쟁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통해 수행했다.

항쟁의 사회극은 신군부의 승리로, 구체제를 더욱 강화시키는 ‘재통합’으로 끝난 것일까? 필자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본다.

광주 사회극은 지배층이 바라는 안온한 해피엔드 쪽으로 좀처럼 가질 않았다. 1980년 5월 27일 이후의 상황은 더욱 확산된 저항이 나타나고(새로운 위기), 이에 대항하는 정권 측의 탄압(강화된 교정 조치)이 끝없이 지루하게 반복되는 ‘교정-위기의 악순환’에 가까웠다. 따라서 시간이 흐를수록 사태는 ‘재통합’이 아닌 ‘분열’ 쪽으로 흘러갔고, (신군부 중심으로 단합된 ‘하나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두 개의 대한민국’ 현상이 갈수록 뚜렷해졌다. 참담한 비극에도 불구하고 광주항쟁의 사회극은 결코 교정될 수 없는 장기적인 위기로의 경향, 재통합이 아닌 분열로 종결되려는 경향을 강하게 드러냈다.

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 물론 여기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항쟁의 종결 방식이 해석의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광주항쟁이 마무리되는 과정과 방식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항쟁의 초기부터 광주 리미널리티가 형성되었고 이 리미널리티의 기본 성격은 ‘변혁의 리미널리티’였지만, 시민들이 광주의 통치권을 장악한 후인 5월 22일부터 계엄군이 재진입한 5월 27일까지 ‘변혁의 리미널리티’를 ‘질서의 리미널리티’로 전환시키려는 움직임 또한 내부에서 끊임없이 나타났다. 그로 인한 시민 측 지도부 내부의 긴장과 갈등도 지속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세 국면을 구분하는 게 유용할 듯하다. (1) 5월 22일 이후 구성된 일반수습위원회(5·18수습대책위원회)와 학생

수습대책위원회 내부에서는 ‘무조건적인 무기 반납 후 관용·선치’를 추구하는 ‘투항파’와 이에 맞서는 ‘투쟁파’의 두 세력이 대립했고, 5월 24~25일을 거치면서 ‘투항파’ 인사들은 모두 축출되었다. (2) 이에 따라 5월 25일 이후 시민 측 지도부 내부의 대립은 ‘협상파’(수습파) 대 ‘투쟁파’(항쟁파)의 구도로 재편되었고, 25일 밤부터는 ‘투쟁파’가 확고한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당시 투쟁파 혹은 항쟁파의 입장은 ‘협상에 의한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목표로 한 ‘일면 투쟁, 일면 협상’ 전략에 가까웠다. (3) 5월 26일 새벽 계엄군의 시내 진입이 시작된 가운데, 유혈 사태의 재발을 막고 사태의 평화적 종결을 위해 이른바 ‘죽음의 행진’이 감행되었다. 행진에 이은 마지막 협상에서 제시된 시민 측의 요구들, 나아가 민주정부 수립을 비롯하여 5월 26일 두 차례 열렸던 ‘민주수호 범시민결기대회’에서 수렴했던 시민 측 요구들은 신군부 세력에 의해 모두 묵살되었다. 신군부 측이 무기 반납과 도청 철수 등 무조건적인 투항만을 요구하는 가운데, 시민 측에게는 공포에 의한 순응(‘투항’), 그리고 저항의 지속(‘결사항전’)이라는 양자택일의 극단적인 선택지밖에 남지 않게 되었다. 26일 저녁 도청에서 열린 마지막 회의에서는 ‘결사항전’ 노선이 채택되었고, ‘투항’(무기 반납과 자진 해산)을 주장하던 ‘수습파’ 인사들은 그날 밤 도청과 광주 YWCA 건물을 떠났다. 이제 비타협적인 항전파 인사들만 외롭게 남겨졌다. 그들은 5월 27일 새벽 쓰나미처럼 밀려드는 계엄군과 맞서 싸우다 죽거나 부상당하거나 체포당했다(광주광역시 5·18사료 편찬위원회 1999, 126-131; 최정운 2012, 261-268; 정문영 2019, 108-114).

이런 비극적 결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필자가 보기에 그 하나

는 신군부 세력을 향한 ‘오명(汚名)과 낙인(烙印)’이었고, 다른 하나는 살아남은 자들과 후대를 향한 ‘메시지와 올림’이었다.

우선, 5월 26일 밤 항전파 인사들이 내린 최종 결정은 압도적 우위에 있는 불의한 적(敵)과 직면하여 명백한 패배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신념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적(박해자)과 타협하거나 적에게 굴복하지 않으려는, 일종의 ‘집단적 순교’(collective martyrdom)에 가까운 선택이었다. 다음 날 새벽 그들은 적(박해자)들에 의해 철저히 유린당했다. 항쟁 마지막 날 풍경의 이런 비극성은 곧장 한국 현대사에 깊게 새겨진 거대한 생채기가 되었다. 그리하여 이미 항쟁 초기부터 신군부에게 부여되었던 ‘학살자’ 오명은 1980년 5월 27일 새벽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낙인으로 바뀌었다.

광주항쟁의 비극적 결말에 담긴 또 다른 의미는 살아남은 자들과 후대에 주는 ‘메시지’와 감정적 ‘올림’이었다. 5월 27일 새벽의 비극적이지만 자발적인 죽음을 통해 항쟁파들이 남긴 메시지는 이중적인 것이었다. 우선, 항쟁 지도부는 몇 차례에 걸쳐 무장한 중·고등학생들로부터 무기를 회수하여 집으로 돌려보냈다. 5월 26일 밤에도 도청과 YMCA 건물에 있던 많은 이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떠나갔다. 더 많은 이들은 다음날 새벽 애처로운 가두방송을 들으면서도 두려워하며 집에 머물렀다. 떠나보낸 혹은 떠나간 이들을 향해 최후 희생자들은 광주 바깥세상 사람들과 후세대에게 ‘나를 증거하라’고 말한 셈이었다. 다시 말해 그들로 하여금 ‘역사의 증인/증언자’가 되도록 명령하거나 호소한 셈이었다. 둘째, 죽은 이들은 ‘그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는 메시지를 남겼다. ‘내가 죽을 때, 내

가 고난을 당할 때, 내가 가장 고통스럽고 두려운 결단을 내릴 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는가'하는 메시지 말이다. 고립된 광주 시민들은 여러 차례의 쫓기대회를 통해 간절한 심정으로 전 국민·민족에게 그리고 전국 종교인과 대학생들에게 함께 쫓기해줄 것을, 언론인들에게 진실을 보도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었다. 5월 27일의 비극적인 집단적 죽음은 이러한 맺힌 '촉구'의 목소리를 더욱 증폭시켜놓았다.

지금까지 간략히 살펴보았듯이, 사회극의 시각으로 접근할 경우 광주항쟁은 대략 네 가지 점에서 매우 특이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최초의 '위반'이 아래로부터가 아니라 위로부터, 즉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에 반하는 신군부 세력의 5·17쿠데타(계엄 전국 확대 조치)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다. 대부분 역사와 사회들에서 사회극을 촉발시키는 '최초 위반'은 피지배 세력 혹은 저항세력의 몫이었지만, 광주항쟁에서는 그 반대였다.

둘째, 교정 조치가 위(신군부)와 아래(광주 시민)로부터 모두 나왔다는 점, 다시 말해 대립하는 양측(시민 측과 신군부 측) 모두가 항쟁의 특정 시점들에서 번갈아가며 적어도 세 차례씩 '교정의 주체'로 등장했다는 점도 특이했다. 대부분 역사적 사례들에서 사회극의 교정 주체는 지배자들이었다. 그러나 광주항쟁에서는 지배자들과 저항세력 모두가 교정 조치의 주역들이었다.

셋째, 신군부 측과 저항세력 측에서 시도한 교정 조치들은 실패를 거듭했고, 그런 와중에 '교정에서 위기로의 회귀' 양상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 광주의 사회극은 좀처럼 마지막 종결 단계로 전진하지 못했다. 악

순환에 가까운 이런 상황은 신군부에 의해 ‘광주 해방구’가 파괴된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넷째, 광주항쟁의 경우 마지막 단계에서 기존 질서로의 ‘재통합’에 실패하여 기존 체제로부터의 ‘분리’, 기존 체제 자체의 ‘분열’로 귀착되는 상황에 가깝다. 이런 역사적 시나리오의 현실화는 급진적 개혁운동이나 혁명적 사태에서나 나타나는 아주 드문 현상인데, 광주항쟁이 바로 그에 부합하는 사례였다고 말할 수 있다.

3. 항쟁 진압 이후: 재통합인가, 균열인가

광주 사회극이 (교정되기 어려운) 장기화된 ‘위기’로의 경향, 그리고 (재통합이 아닌) 사회의 ‘분열’로 종결되려는 경향을 강하게 드러냈던 것, 바로 이 점이 4·19와 구분되는 5·18의 중요한 차이였다. 4·19혁명은 정권 축출과 교체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등 구(舊)군부에 의한 5·16쿠데타 이후 급격히 ‘재통합’으로 흘러갔다. 그러나 1980년 5월 27일의 무력진압과 엄청난 유혈사태, 뒤이은 대대적인 관련자 검거·처벌 선포와 공포정치에도 불구하고, 1961년 5·16쿠데타 때처럼 혁명적 열기와 민주화 열망이 급속히 증발해버리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4·19의 ‘계승’을 공식 표방함으로써, 다시 말해 ‘독재정권이 민주혁명의 계승자임을 자임하는’ 자기모순과 희화화를 통해, 5·16의 구군부 세력은 ‘4·19정신’을 가장 효과적으로 조롱하고 형해화하는 데 성공했다. 반면에 1980년의

신(新)군부는 5·18과 관련된 모든 것을 왜곡했을 뿐만 아니라, 항쟁의 역사적 사실 자체를 은폐하면서 논의 자체를 봉쇄하고 금기시하는 데 주력했다(이용기 1999, 396-398). 그러나 민주혁명(4·19) 속으로 파고들어가 그것의 생명력을 빼앗고 빈껍데기로 만들어버리는 게 아니라 민주혁명(5·18) 자체를 금단(禁斷)의 영역에 가둠으로써, 5·18은 오히려 강인한 생명력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었다. 억압되고 금지되었기 때문에 일상화·제도화될 수 없었고, 억압·금지되었기 때문에 항쟁의 변혁적 에너지와 항쟁 기억의 전복성이 고스란히 유지되는, ‘억압과 금지의 역설’이 작동했다.

5·18은 1970년대 민주화운동은 물론이고 그 이전의 4·19에 비해서도 훨씬 강한 ‘적대’(敵對)를 포함하고 있었다. 시민들은 진압군의 공격에 맞서 스스로 무장했으며, 군인들이 퇴각한 광주를 해방구로 만들어 직접 통치했다. 많은 이들이 군인들과의 교전에 참여했고 그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부상당했다. 그리고 시민들의 봉기는 군대에 의해 폭력적으로 진압당했다. 이 과정을 지켜보거나 전해들은 많은 이들이 분노와 좌절감에, 그리고 도덕적 죄책감에 사로잡혔다.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갖고서도 이런 처참한 유혈사태를 묵인하고 방조한, 나아가 진압군 파견을 승인하고 협조한 미국에 많은 이들이 분개했다. 1980년 5월의 경험과 감정을 공유한 하나의 세대가 그렇게 탄생했다.

광주항쟁의 비극적 종결 이후에 나타났던 좌절감과 패배의식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이미 앞에서 언급했던 것, 즉 최후 항쟁에 나섰던 이들이 남긴 두 가지 메시지—‘나를 증거하라’ 그리고 ‘그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가 살아남은 이들의 양심에 남긴 큰 울림과 막중한 무게도 과소평가해선 안 될 것이다. 많은 이들이 1980년대 사회운동의 발전 요인을 광주항쟁에 대한 부채의식으로 설명했다. 예컨대 박인배는 민주화운동에 가담했던 이들에게 광주항쟁이 끼친 심리적 영향을 죄책감, 자괴감, 분노의 세 가지로 표현했다. “1980년 5월 광주의 기억은 민주화운동 진영의 모든 인사들의 뇌리에 지울 수 없는 각인으로 남았다. 살아남은 자들은 먼저 간 영령들에 대한 죄책감에 어쩔 줄 몰라 했고, 전두환 일당에 대한 분노로 칼을 갈았으며, 무기력하게 나약한 자신에 대한 자괴감에 괴로워했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10, 642). 광주항쟁을 향한 분노와 죄책감·자괴감이 복합된 감정은 한편으로 저항 이념의 급진화로, 다른 한편으로 강력한 저항 에너지로 분출했다. 정근식(2015, 256)은 “공동체적 윤리”에 기초한, 죄책감-부채감의 연쇄적이고 나선형적인 확산 과정에 대해,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거대한 저항적 에너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1980년 5월 27일 새벽, 도청이나 광주YWCA에서 저항했던 시민군들은 계엄군에 의해 죽음을 맞거나 체포되었다. 윤상원의 죽음은 그의 예언대로 광주 시민들에게 커다란 부채감으로 작용하여 민주주의를 위한 증언을 하도록 만들었다. 당시 도청에서 체포되거나 5월 26일 밤 도청에서 빠져나와 목숨을 구했던 사람들은 자신만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에 시달렸고, 민주화를 갈망하던 광주 시민들은 도청에서 희생된 이들에 대한 부채감에 시달렸다. 광주 시민들의 희생은 민주적 정치공동체를 열

망하고 있던 국민들에게 도덕적 부채감을 주었다. 광주민주항쟁의 진실을 모르던 다수 국민들은 당시에는 이런 도덕적 부채감을 갖지 않았으나, 점차 항쟁의 진실이 알려지면서 도덕적 부채감을 느끼게 되는 과정을 밟았다. 이런 공동체적 윤리는 1979년 부산과 마산에서 민주항쟁에 참여했던 학생 및 시민들, 그리고 1980년 5월, 이른바 서울의 봄 시기에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학생과 시민들에게 크게 작용했다. 이들이 지니게 된 죄책감과 부채감은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과 사회정의를 추동하는 정신적 에너지가 되었다.

항쟁 이듬해부터 광주뿐 아니라 전국적인 차원에서 거대한 ‘장례공동체/추모공동체’가 형성되어갔다. 매년 5월 중순이 되면 전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망월동 묘역을 참배한 뒤 주로 추도미사나 추모예배의 형식을 취한 기념행사에 참여하곤 했다. 5·18은 전국적인 ‘기일’(忌日) 혹은 제삿날이 되어버렸다. 이조차 정권의 극심한 방해 때문에 ‘장례 투쟁’이 될 수밖에 없었다(정근식 2010, 86-91). 광주항쟁 이후 ‘저항적 자살’을 감행한 이들이 극적으로 증가했다. 1970년대에는 이런 사례가 전태일(1970년)과 김상진(1975년)에 불과했지만, 1980년대 전두환 정권 기간에는 그 숫자가 26명으로 늘어났다. 전두환과 함께 군사쿠데타를 이끌었던 노태우의 집권 시기에도 무려 48명이 저항적 자살을 선택했다(임미리 2017). 이들은 자신들의 죽음을 통해 앞서 광주항쟁에서 죽은 이들을 상기시켰고, 또 상징적으로 되살려냈다. 5·18의 상흔은 1980년대의 저항적 감수성에도 깊이 새겨졌다. 5·18을 소재 혹은 주제로 삼은 작품들은 시·노래·판화

등의 문화운동으로, 1987년 이후에는 사진 분야로까지 확산되었다. 특히 1982년 4월에 만들어진 <임을 위한 행진곡>은 새로운 비판적·저항적 감성구조에 바탕을 둬으로써 사회운동 감수성 자체의 변화를 초래했다는 게 정근식(2015, 253-254, 266-267)의 평가다. 광주항쟁 이후 이와 관련된 민중가요나 운동가요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천유철(2016, 150-152)은 이를 ‘5월 음악’으로 명명했다.

광주항쟁을 기억하고 계승하려는 이후의 노력은 종종 ‘5월운동’ 혹은 ‘5월투쟁’으로 불렸다. “1980년 5월의 광주항쟁에서 파생된 문제를 해결하고, 그 항쟁이 구현했던 정신과 실천행동을 계승하려는 지속적이고 집단적인 행동”인 5월운동은 장기성과 주기성, 집중성, 통합성 등의 특징을 보였다. 5·18은 저항을 포기할 수 없도록 만드는, 저항운동에 투신하게 만드는, 투쟁의지를 일깨우는 힘의 원천이었고, “운동권 전체가 5·18을 매개로 결합됨으로써 전국적으로 거대한 흐름을 형성”했다(나간채 2013, 12-13, 63). 매년 5월마다 광주항쟁에 대한 ‘전복적 기억’(subversive memory)과 ‘부채의식’이 함께 재생되는 가운데 5·18은 신군부 세력을 향한 저항의 동력원으로, 저항의 촉매제로 기능했다. 1980년대에 체제 저항세력의 요구는 민주화와 함께 5·18과 관련된 진상규명, 희생자 명예 회복과 보상, 학살 책임자 처벌로 집약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러니 “무기를 내려놓고 도청을 계엄군에게 비워줬더라면 6월항쟁은 없었을 것이며 지금 이 시간도 ‘5공’ 치하였을 것”이라는 최정운(2012, 279)의 언명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필자는 앞에서 광주항쟁의 기간 동안 ‘변혁의 리미널리티’가 등장했다

고 말했다. 광주에서 형성된 이 변혁의 리미널리티는 무엇을 지향했고 목표 삼았는가? 우리가 ‘최소/최대 강령’이라는 용어를 변형하여 ‘최소 목표’와 ‘최대 목표’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면, 광주항쟁의 최소 목표는 명백히 ‘군 부독재체제의 종식’과 ‘민주화’였다. 그러나 광주항쟁에는 이것을 훨씬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었다. 불과 열흘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광주에서는 시민적 덕목, 자유, 참여, 인정(승인)을 중심으로 한 ‘시민적 공화주의’(정근식 2007), 혹은 민주공화주의적 가치 지향과 애국주의적 정체성이 결합된 ‘애국적 민주공화주의’(신진욱 2011) 이상(理想)이 집약적으로 표출되었다. 최정운(2012, 197, 320)은 광주 시민들이 보여준 초인적인 항쟁의 동인(動因)을 ‘인간과 생명의 존엄성’에서 찾았다. 광주의 변혁적 리미널리티가 지향했던 최소 목표와 최대 목표 어느 것도 전두환 군부정권 치하에서는 달성될 수 없었다. 1987년부터 시작된 민주화 이행 이후 광주 리미널리티의 ‘최소 목표’가 비로소 하나둘씩 달성되었다.

이처럼 민주화 이후 광주 리미널리티의 최소 목표가 점차 현실 속에 구현되고 성취되면서, ‘교정-위기의 악순환’ 속에 맴돌면서 ‘분열’(두 개의 대한민국) 쪽으로 치닫던 광주 사회극의 흐름이 비로소 서서히 ‘재통합’ 쪽으로 전환되었다. 민간정부·민주정부 수립을 비롯하여, 폭동·폭도에서 민주화운동·국가유공자로의 변화, 전두환·노태우 처벌과 정부의 공식 사과, 5·18국가기념일과 5·18국립묘지의 등장,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런 일들을 겪는 과정에서 광주항쟁이 지닌 특유의 역동적이고 드라마틱한 성격은 점차 감소했으며, 광주항쟁을 둘러싼 격렬했던 정치적-사회적 갈등의 강도 역시 조금씩 감소하게 되었다.

요약하자면, 광주항쟁 사회극의 마지막 단계는 (1) 1980년 5월 말부터 시작되어 수년 동안 ‘분열’ 양상이 급격히 확대되다가, (2) 1987년의 민주화 이행 이후 기존 흐름이 반전되면서 ‘분열’과 ‘재통합’의 양상이 혼재되기 시작했고, (3) 1998년의 평화적 정권교체 이후 새로운 흐름이 더욱 빨라지면서 ‘재통합’의 측면이 갈수록 우세해지다가, (4) 2000년대 초—혹은 늦어도 2010년대 초—에 이르러 대체로 ‘재통합’의 방향으로 종결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결국 광주 사회극은 1980년 5월 27일 아침에 끝나기는커녕, 그로부터 무려 20년 이상이나 끈질기게 계속되었던 것이다.

4. 결론

광주항쟁에 대한 ‘전복적 기억’은 5공화국이라는 군부통치체제에 끊임 없이 균열을 만들어내면서 이 체제를 불안정과 위기로 몰아갔던 요인이었다. 아울러 그 전복적 기억은 1980년대를 관통하면서 부단히 이어졌던 반(反)군부독재 민주화운동, 나아가 1987년의 6월항쟁에 이은 민주화 이행을 이끌어냈던 핵심적인 요인이었다. 민주화 이행 이후 처음 치러진 국회의원 총선거가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라는 초유의 상황을 만들어내자, 5·18청문회(광주청문회) 등 광주항쟁과 관련된 ‘과거사청산’ 문제가 최우선의 정치적 과업으로 떠올랐다(정문영 2019, 132-143).

1987년부터 민주화 이행이 개시되고 더디게나마 정치적 민주화를 거쳐 사회적·경제적 민주화로 조금씩 나아가는 가운데, 광주항쟁에 대한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희생자 명예 회복, 성역화, 배상, 기념 활동 등을 거치면서 광주 사회극은 비로소 종결의 방향으로 서서히 전진해갔다. 이처럼 민주화 이후 광주항쟁의 사회극 자체는 사실상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광주의 변혁적 리미널리티에서 추구되었던 ‘최소 목표’조차 모두 달성된 것은 아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심화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보다 직접적으로 ‘항쟁의 정당성·정통성 정립’ 문제, 그 중에서도 실종자 유해 발굴과 암매장 의혹 규명, 항쟁 관련 연행자들에 대한 고문과 성폭력 문제, 집단 발포 및 헬기 사격 명령자와 미국의 역할 규명 등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 항쟁이 살아남은 이들에게 낙인처럼 남긴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문제, “상처 입은 자들의 부서지고 무너진 삶들”, “살았으되 죽은 삶들”을 보듬고 치유하는 문제도 여전하다(김정인 2019). 그로 인해 오늘날에도 “산 자들은 살아 있는 것도 죽은 것도 아닌 중음(中陰)의 유령들처럼 삶과 죽음의 경계 영역에 불안하게 거주한다”(한순미 2019, 467). 북한군 개입설을 비롯하여 5·18에 대한 군사반란 세력, 극우 단체·인사들, 극우·보수 언론들의 왜곡과 비방·망언도 그치지 않고 있다(은우근 2019, 222-229). 5·18기념식에서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둘러싼 갈등 역시 2017년 5월 정권교체가 되고서야 비로소 일단락되었다. 2018년 2월 국회를 간신히 통과한 5·18특별법(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까지의 과정, 제정 이후의 시행 과정도 결코 순조롭지 못하다. 1987년 이후 점차 ‘정통기억’(orthodox memory)으로 자리 잡고 있는 5·18에 대한 끈질긴 저항을 완전히 제압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어쨌든 이런저런 실천적 난제들이 미래의 숙제로 여전히

남아 있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극 이후'의 광주항쟁은 한국사회에서 두 가지의 중요한 역사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각각 '썰기 기능'과 '추동력 기능'으로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썰기 기능과 추동력 기능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즉 하나는 과거 쪽으로, 다른 하나는 미래 쪽으로 작용한다. 썰기 기능이 역사의 '역진(逆進)을 방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면, 추동력 기능은 역사의 '전진(前進)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우선, 광주항쟁은 오늘날의 한국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역사적 썰기'(historical wedge) 중 하나이다. “민주화나 근대화가 구불구불하거나 심지어 뒤로 돌아 우회하는 여러 길들을 거쳐 가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라 할 지라도, 민주화나 과거사청산 작업은 일종의 '역사적 역진방지장치'(historical ratchet)로 기능할 잠재력을 갖는 것들을 다수 산출해내기 마련이다.……민주화의 결실로 혹은 과거사청산의 부산물로 창출되고 공인(公認)의 과정까지 거친 수많은 성스러운 시간(기념일), 신성한 장소, 신성한 인물·사물 중 일부도 역사적 썰기로 작용할 잠재력을 지닌다. 일단 사회적 인정을 받을 경우, 역사적 썰기는 혁명적 사태나 쿠데타적 사태가 아니고서는 혹은 헌정 중단의 비상사태를 선포할 권능을 지닌 절대주권자의 등장이지 않고서는 그 존재를 부인하거나 효능을 무력화시키거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없는 특징을 지니게 된다. 아마도 가장 강력한 역사적 썰기는 '국립'의 위상을 확보한 집단묘지라는 특정한 공간, 그리고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날들 가운데 '국가기념일'의 지위에 오른 특정한 시간일 것이다.……어떤 기념일이나 무덤은 한번 성립되면 마치 철옹성처럼 깨뜨리기 힘들게 된다”(강인철

2019, 660-661). 필자는 5·18국가기념일이라는 성스러운 시간, 그리고 국립 5·18민주묘지라는 성스러운 공간이야말로 한국사회 안에서 작동하는 역사적 켜기의 가장 전형적인 사례들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광주항쟁은 역사의 전진과 진보를 위한 강력한 동력으로도 기능하고 있다. 제주4·3, 여순사건, 그리고 한국전쟁을 전후한 수많은 민간인 학살 사건과 관련된 무수한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은 광주 사회극에서 얻은 희망을 동력 삼아 각기 지난한 역사투쟁에 임하고 있는 중이다. 광주항쟁의 추동력 기능은 한국을 넘어 다른 사회들에서까지 민주화운동·인권운동을 격려하고 촉진하는 역할로 나아가고 있기도 하다. 특히 광주항쟁의 ‘추동력 기능’과 관련하여, 우리는 광주항쟁이 ‘최소 목표들’보다 더욱 위대하고 원대한 그 무엇을 처음부터 배태하고 있었음을 재차 상기할 필요가 있다. 광주는 “하나의 이름이라기보다 혁명과 운동, 새로운 삶의 꿈을 지칭하는 상징”(이진경·조원광 2009, 131)이기도 했다. 광주 리미널리티의 ‘최대 목표’를 현실화하는 일, 그리고 광주 커뮤니티를 ‘규범적 커뮤니티’나 ‘이데올로기적 커뮤니티’로 구체화하는 일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⁶⁾ 광주항쟁의 자발적 커뮤니티를 ‘이데올로기적 커뮤

6) 빅터 터너는 커뮤니티의 유형론을 발전시켰다. 그는 ‘지금 여기’ 현재진행형의 커뮤니티를 ‘자발적인 혹은 실존적인 커뮤니티’(spontaneous or existential communitas)라고 불렀다. 또한 커뮤니티를 영속화하거나 지속력 있게 제도화하려는 ‘커뮤니타스 이후의 커뮤니티’를 ‘이데올로기적 커뮤니티’(ideological communitas)와 ‘규범적 커뮤니티’(normative communitas)로 구분했다. 이 가운데 ‘이데올로기적 커뮤니티’는 자발적 커뮤니티에 기초한 유토피아적 사회모델을 발전시키려는 일련의 노력과 관련되며, ‘규범적 커뮤니티’는 자발적 커뮤니티의 평등주의적·인간주의적 사회관계를 영속적인 제도와 조직으로 구현하려는 하위문화 내지 하위집단들과 관련된다(V. Turner 1982, 47-50; 1969, 132; 1974, 169, 232).

니타스'로 구체화하는 과업은 이른바 '광주정신'을 다듬고 체계화하며 새로운 상황에 맞게 재해석해가는 것이다. 그리고 '규범적 커뮤니티스' 실현 문제는 평등주의적이고 인간 존엄성을 인정하는 사회를 건설하는 과업으로 압축된다.

국립5·18민주묘지의 내부구성에도 이런 커뮤니티스 이상이 담겨 있다. 예컨대 국립5·18민주묘지의 참배광장에는 두 개의 조각상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 하나는 '무장항쟁 군상(群像)'이고 다른 하나는 '대동세상 군상'이다. 2016년 4월 당시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의 1층 제1전시실을 구성하는 10개의 주제 중 2개가 '자치공동체'와 '대동세상'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기록관 2층 제2전시실을 구성하는 4개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시민공동체'였다. '이미 실현된 미래'인 광주항쟁은 오늘날 한국인들에게 자치공동체, 시민공동체, 대동세상에 대한 희망과 영감의 가장 큰 발원지 중 하나가 되었다. ~~이것이~~

참고문헌

- 강인철. 2019. 『경합하는 시민종교들: 대한민국의 종교학』.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광주광역시 5·18사료 편찬위원회 편. 1999. 『5·18 광주민중항쟁』. 광주: 광주광역시 5·18사료 편찬위원회.
- 김대현. 1999. "사회극(Social Drama)의 관점에서 본 <쉬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성국. 1999. “아나키스트적 시각에서 본 5·18.” 조희연·정호기 편. 『5·18민중항쟁에 대한 새로운 성찰적 시선』. 파주: 한울. 287-315.
- 김인국. 2015. “하느님 나라와 오월의 절대공동체.” 『신학전망』 190. 2-22.
- 김정인. 2019. “상처 입은 자, 그들의 부서진 삶.” 김정인 외. 『너와 나의 5·18: 다시 읽는 5·18 교과서』. 파주: 오월의봄. 168-194.
- 김희승. 2015. “1980년 5월 광주공동체의 의미와 현재화에 대한 고찰.” 『신학전망』 190. 62-96.
- 나간채. 2013. 『광주항쟁 부활의 역사 만들기』. 파주: 한울.
- 류유희·이승진. 2014. “사회극 이론의 구조를 가진 애니메이션의 리얼리즘에 관한 연구: 애니메이션 <돼지의 왕>을 중심으로.” 『애니메이션 연구』 10(1). 54-68.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편. 2010. 『한국민주화운동사3: 서울의 봄부터 문민정부 수립까지』. 파주: 돌베개.
- 반 젠넵, 아놀드. 1985. 『통과의례: 태어나면서부터 죽은 후까지』. 전경수 역. 서울: 을유문화사.
- 신진옥. 2011. “광주항쟁과 애국적 민주공화주의의 탄생: 저항적 시민사회의 형성과 정체성 구성에 대한 구조해석학적 분석.” 『한국사회학』 45(2). 58-90.
- 은우근. 2019. “5·18, 진실과 거짓말: 그들은 왜 5·18을 왜곡·조작하는가?.” 김정인 외. 『너와 나의 5·18: 다시 읽는 5·18 교과서』. 파주: 오월의봄. 168-194.
- 이경미. 2013. “연극치료에 대한 긍정적 자기질문: 리미널리티와 ‘타자의 윤리학’을 중심으로.” 『연극예술치료연구』 3. 49-68.
- 이기중·김명준. 2008. “빅터 터너의 ‘사회적 드라마’ 이론으로 본 ‘신정아-변양균 사건’.” 『사회과학연구』 16(1). 388-424.
- 이용기. 1999. “5·18에 대한 역사 서술의 변천.” 학술단체협의회 편. 『5·18은 끝났는가』. 서울: 푸른숲, 1999. 393-419.

- 이진경·조원광. 2009. “단절의 혁명, 무명의 혁명: 코뮌주의의 관점에서.” 조희연·정호기 편. 『5·18민중항쟁에 대한 새로운 성찰적 시선』. 파주: 한울. 131-165.
- 임미리. 2017. 『열사, 분노와 슬픔의 정치학: 한국저항운동과 열사 호명구조』. 파주: 오월의봄.
- 임철우. 1997a·b·c. 『봄날 1~3』. 서울: 문학과지성사.
- _____. 1998a·b. 『봄날 4~5』. 서울: 문학과지성사.
- 정근식. 2007. “광주민중항쟁에서의 저항의 상징 다시 읽기: 시민적 공화주의를 중심으로.” 『기억과 전망』 16. 143-183.
- _____. 2010. “사회운동과 5월 의례, 그리고 5월 축제.” 정근식 외. 『지역 민주주의와 축제의 관계』. 서울: 중원문화. 79-107.
- _____. 2015. “〈임을 위한 행진곡〉: 1980년대 비판적 감성의 대전환.” 『역사비평』 112. 252-277.
- 정문영. 2019. “5·18민주화운동, 열흘간의 드라마.” 김정인 외. 『너와 나의 5·18: 다시 읽는 5·18 교과서』. 파주: 오월의봄. 50-117.
- 조정환. 2009. “광주민중항쟁과 제헌권력: 자율주의의 관점에서.” 조희연·정호기 편. 『5·18민중항쟁에 대한 새로운 성찰적 시선』. 파주: 한울. 167-202.
- 천유철. 2016. 『오월의 문화정치: 1980년 광주민중항쟁 ‘현장’의 문화투쟁』. 파주: 오월의봄.
- 최정운. 2012. 『오월의 사회과학: 사회과학자의 시선으로 새롭게 재구성한 5월 광주의 삶과 진실』. 파주: 오월의봄.
- 카치아파카스, 조지. 2009. “역사 속의 광주항쟁.” 조희연·정호기 편. 『5·18민중항쟁에 대한 새로운 성찰적 시선』. 파주: 한울. 317-339.
- 터너, 빅터. 2014. 『제의에서 연극으로: 놀이의 인간적 진지성』. 김익두·이기우 역. 서울: 민속원.
- _____. 2018. 『인간 사회와 상징 행위: 사회적 드라마, 구조, 커뮤니타스』. 강대

훈 역. 서울: 황소걸음.

- 터너, 빅토. 2005. 『의례의 과정』. 박근원 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 한순미. 2019.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체: 인간이 무엇이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김정인 외. 『너와 나의 5·18: 다시 읽는 5·18 교과서』. 파주: 오월의봄. 168-194.

- Turner, Edith. 2012. *Communitas: The Anthropology of Collective Joy*.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Turner, Victor W. 1969. *The Ritual Process: Structure and Anti-Structure*.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_____. 1974. *Dramas, Fields, and Metaphors: Symbolic Action in Human Societ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_____. 1982. *From Ritual to Theatre: The Human Seriousness of Play*. New York: PAJ Publications.
- _____. 1987. *The Anthropology of Performance*. New York: PAJ Publications.
- Van Gennep, Arnold. 1960. *The Rites of Passage*. Monika B. Vizedom and Gabrielle L. Caffee t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Abstract

Gwangju Uprising from the Viewpoint of Social Drama

Kang, In-cheol

Hanshin University, Professor

This article demonstrates the first attempt to analyze the Gwangju uprising utilizing the concept of social drama developed by Victor Turner. When approaching from the viewpoint of social drama, the Gwangju uprising presents a unique case in four respects. First, the first 'breach' occurred not from the bottom but the top, that is, the first breach was made when the new military regime extended the martial law nation-wide against the people's strong demand for democratization. Second, the 'redressive' measures came from both the top (the military) and the bottom (Gwangju citizens), in other words, the two opposing sides took turns in appearing as the 'agents of redress' at different times during the uprising. Third, the redressive measures attempted by the military government and the citizens continued to fail, leading to multiple repetitions of the 'regression from redress to crisis.' Fourth, the fourth stage in the social drama of the Gwangju uprising at the time in 1980 was closer to a 'schism' of the existing system, failing in the 'reintegration' into the existing order. Moreover, this final stage in the social drama of Gwangju continued in a state of schism for over 20 years before it could be concluded in the course of 'reintegration.'

■ **Keywords:** Social Drama, Victor Turner, May 18th Uprising, Gwangju Uprising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Liminality, Communitas

투고 : 2019/03/25 심사 : 2019/04/10 확정 : 2019/04/29